

# 거대도시 “삶의 세계”의 二元구조화

권 태 준\*

<목 차>	
1. 머릿말	3. 경박한 장소적 분위기
2. 세계적 중심의 虛構性	4. 맺음말

## 1. 머릿말

20세기 후반은 거대도시들의 시대이다. 세계적으로 거대도시들은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생산양식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의 結節地點이 되어 있다. 이미 脫공업화단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바야흐로 근대적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등은 범 지구적인 새로운 생활양식, 생산양식의 結節地로서 相通하면서 그 각 나라안에서의 기대와 실험의 결집공간이고 그 확산의 중심지이다. 캘커타와 멕시코시티와 카이로, 자카르타나 상해 그리고 서울 같은 곳은 그들 나름대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관문인 동시에 나라안 변화에 따른 모든 기대와 갈등의 용광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일고 있는 변화의 국제적 국내적 범위와 그 대중성이 이런 거대도시들의 공간적 스케일 및 그 인구적 구성과 규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에 예로 든 도시들도 그 하나하나의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고 특수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汎지구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중적 참여기대와 좌절감, 사회적 갈등과 분절화 같은 현상은 어느 거대도시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이다. 이제 막 세계경제 체제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들 가운데서도 머지 않은 장래에 이같은 거대도시들이 생겨 나기 시작할 것이 틀림없다.

20세기 후반에 이 거대한 범지구적 변화의 한편 끝은 脫공업화에 따른 대중의 근대 산업 사회적 조직과 규율의 해체과정의 시작이고, 다른 한편에는 이제 막 시작한 근대적 산업화 과정에의 대중적 참여와 좌절의 진통이 있다. 이처럼 서로 극단적으로 對照的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양편 다 같이 대중적 변화과정이라는 사실에 공통성이 있다. 한편에는 대중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적 조직해체에 따른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새로운 구조에 의 앞다툼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다. 서양 선진산업국들의 19세기~20세기 초에 걸친 근대적 산업화가 비교적 소규모의 공업도시들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견주어 보면, 이 20세기 후반의 산업구조 변화과정에 있어 거대도시들의 역할의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 선후진국간에 별 차이없이 사회가 그때 보다 훨씬 더 열려 있고 따라서 국내국제적으로 세상변화의 정보가 구석구석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범지구적 그리고 대중적 정보의 공개적 유통 回路 가운데 거대도시들이 그 집중—확산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정보의 생산과 확산은 다양한 문화적, 인구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의 거대도시들이 바로 그 공간적 기반이다. 이런 연고로 20세기 후반의 거대도시들은, 산업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품 생산활동의 중심지이기 보다 생산자 서어비스 또는 몰려드는 인구를 시장으로 하는 개인적 서어비스의 중심지이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험장이다. 이런 와중에 거대도시들은 어느 곳이나 전체로서는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는 개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오히려 극히 불안정하고 피상적이다. 말하자면 수많은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세계”(lebenswelt)가 위와 같은 전면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의 큰 물결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 2. 세계적 중심의 虛構性

도시는 어디서나 그 기원 이후,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도시의 규모가 크면 그에 따라 넓은 배후지를 지배하였고 작으면 또 그에 따라 비교적 좁은 배후지를 갖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도시는 한 나라 또는 그 부분 지역의 교역과 생산의 중심지이고 동시에 정치적 행정적 지배력의 중심지였다. 정치적 權力機制와 그 행정적 집행장치가 경제적 중심기능과 함께 장소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므로써 도시의 공간적 중심성은 상당한 정도 제도화 되기도 하였다. 근대적 산업국가에 있어 도시중심성의 제도화형태는 물론, Max Weber가 西歐 중세도시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은, 개별 도시공간의 정치적 자율성, 경제적 자립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Max Weber: 1958)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대적 국가주권의 영토高權이 전국적으로 확립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제기능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통제관리를 위한 結節地點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근대 도시의 중심성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지역 또는 下位 도시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배를 위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같은 중심성이 있으므로 해서 그 세력 범위안에 있는 지역사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一體感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은 “중심

부—주변부”(center-periphery)적 종속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가 기정 사실이 되어 있는 限, 안정성이 유지됨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권력이 그런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미의 一體感과 안정성이 있는 공간을 하나의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비교적 동질적인 생활양식과 안정적인 사회관계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거대도시들은 도시적 공간형태는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사회로서의 一體性은 탈색되어 버린 장소이다. 이런 장소는 공간적 實體는 있으나 지방(locale)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서, 한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공간은 그 규모와 시설로 인해서 사람과 물자의 集散기능은 수행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진 못한다. 국가적 권력의 현 위치가 우연히 이 공간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리적 거리 또는 접근성이 다른 지방들에 대해서, 그 권력의 전국적 비중 여하에 따라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영향은 정치물리학(political physics)적인 또는 고작 경제기능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중심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거대도시들이 지역사회성을 잃어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그 세계적 개방화 때문이다. 내부적 微視的인 차원에서 보면 Georg Simmel, Louis Wirth 등이 산업화 초기의 서양도시들에 관해서 말한 바와 같은, 모여드는 사람들의 數와 그 밀도의 造化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와 밀도의 造化論은 도시의 사회공간적 실체규명을 도시규모에 따른 都市性의 정도의 차 정도로 환원시켜 버린 것이어서, 이 시대의 거대도시들의 동태적 환경변화를 간과하고 있다. 산업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오늘날 세계적 거대도시들은 국제적 문화와 정보의 광범위하고 끊임없는 세례를 받고 있다. 19세기~20세기 초에 걸친 서양도시들의 산업화시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세계체제화 과정 가운데 처해 있다. 오늘날의 거대도시들은 대부분 이같은 맥락에 처해 있는 “세계적 중심도시”(global city) (Manuel Castells: 1985) 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중심성은, 세계적 생산체제와 정보네트워크의 集散기능에 대해서일 뿐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적 통합력은 오히려 한층 더 稀釋시킨다. 거대도시들의 이같은 세계 체제화는 선진산업국들의 脫공업화와 그에 따라 그들의 지배적 생산樣式이 점차 정보기술화 하는데 크게 힘입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바야흐로 근대적 산업화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도 대도시 안의 대중사회는 그 폭발적 기대 수준의 상승과 自發性의 확대로 인해서 정치적 문화적 개방성이 선진국 대도시들에 못지 않은 데다가,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확산되어 가는 세계적 정보통신 네트워크기술이 양편의 대중사회를 동시에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 경박한 장소적 분위기

대도시들의 위와 같은 의미의 脫지역화, 脫국가화 그리고 세계화는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관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안에 사는 개인들의 일상적 삶의 현상으로서의 여러 측면에 당혹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처럼 급속한 대중적인 “세계주의화”(ccsmopolitanization)는 불가피하게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어서, 사회구조와 문화양식의 二元化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저같은 세계화 과정에 능히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기술적 資質을 갖춘 “세계주의적 엘리트”들로 구성된 상층구조와 그렇지 못한 하층구조로 二元化되고, 이에 따라 도시내부의 생활양식도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분절화 된다. 바야흐로 脫공업화 과정에 처해 있는 선진국 대도시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회적 二元구조화의 진통을 겪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저들의 경우에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情報화된 生産 樣式”(informational mode of production)에 스스로 적용한 계층과 지역 그리고 이제 사양화되어 가는 산업체제의 합정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간의 二元化이다(Manuel Castells: 1989).

다른 한편, 이같은 사회 공간구조의 二元化에 개의치 않고 대중은 汎지구적으로 즉시적인 정보통신의 자극으로 인해서,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욕구충족에 급급해 있다. 어떤 사람은 20세기 후반 이같은 대중적 경박성을 두고, 그들의 발달한 자발성과 솔직함의 표현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이런 대중적 불안정, 浮遊와 새로운 엘리트 계층의 세계적 文化意識이 상승작용하여 도시 공간구조 전체로서의 체계성과 일체감을 흐트러 놓는다. 체계성과 일체감이 희석됨에 따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엘리트적 또는 민중적 삶의 양식이 각각의 自足的 領地(enclave)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 표현양식 또한 과감하게 非定型的이다. 엘리트 계층의 영지에서는 그 표현이 대체로 세계주의적인 반면 민중들의 領域에서는 다분히 반체제적이고 즉흥적인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로서 일체감과 체계성, 중심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처럼 산만하고 경박한 장소적 분위기 가운데 노동과 조직규율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근대산업의 핵심기능인 대형 제조업이 능률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 해서 오늘날의 거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제조업으로부터 “들쳐귀 빠진”(unhinged) 生業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면서(S. Fainstein & M. Markusen: 1991), 大자본은 금융자본화 또는 정보산업 자본화하고, 小자본은 개인적 서어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런 대규모 금융자본, 정보산업 자본과 개인적 서어비스업 자본은 그 유동성이 큼은 물론 回轉과 變身이 빠르고 국제적 연계와 영향도 커서, 도시내 地價를 과도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거대도시의 이런 “거품경제”(bubble economy)현상 또한 많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Simmel, Wirth 등의 생각처럼 도시란 본디 그 구성논리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삶의 장소이니, 20세기 후반 거대도시들의 상황을 특별히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異論도 있음직 하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적 도시의 비인간성과 개인적 소외현상은 노동의 사회적 분화와 그에 걸맞는 사회조직의 합리화에 따른 개인들 사이의 情的 근친성, 私的 관계의 상대적 약화를 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와 그것을 담는 공간구조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相合해 있어서, 개인들의 情緒的 자기 표현이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관찰이다. 이에 견주어, 20세기 후반 거대도시들의 세계주의화, 脫중심—지역사회화, 생산자—소비자 서어비스 공간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경박한 장소적 분위기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實存的 뿌리를 흔들어대는 현상이라고 할만하다. 좀 더 극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존재의 가벼움”마저 느끼게 하는 장소적 상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도시공간이 생산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되므로써, 산업조직사회에서 일탈한 개인들의 문화적—多神주의적 離合集散공간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4. 맺 음 말

오늘날 저같은 거대도시적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도대체 개인들의 實存的 의미 탐색에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세계적으로 개방된 생활양식과 정보의 回路에 한 국가가 미칠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이나 되겠는가? 우리 정부처럼 아직도 국가를 도덕규범의 집행자로 여기는 곳에서는 간혹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설교나 캠페인 같은 것을 시도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는 쪽에 마음의 위안이 될 뿐이다.

좀 아이러니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거대도시들의 세계화와 대중적 경박성 때문에 국가는 종래 산업도시사회가 제기하던 많은 어려운 문제거리들로부터 해방된 셈이다.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계급 갈등, 주기적인 실업 그리고 나라에 따라 그야말로 고질적인 인종분규 같은 대중사회에 혼한 집단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대중의 파편화 내지 “少衆化”—“小衆化”에 따라, 그 정치적 심각성 認識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문제들의 근원이 상당한 정도 국제적이라는 이해의 확산 또한 국가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반드시 이런 연고 때문이라고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이 대도시에 대해서 하는 일은 고작 최소한의 치안유지와 자연환경 보호 관리를 위한 약간의 노력, 폭주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도에 급급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은 상당부분 “私營化”(privatize)하므로써, 전체 공간구조에 대한 국가의 公共계획적 개입의 효

과도 점점 제한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현대 국가권력의 “新보수주의화” 경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거대도시들의 내외적 상황변화에 비추어 보건데는, 在來式 국가 역할론과 그 기술관료적 논리의 무기력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집합적 기능의 능률성을 위주로 하는 종래의 산업공간 조직논리에 따른 개입은 이제 適實 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한 반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조차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거대도시들의 상황은 도시공간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새삼 심사숙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Manuel Castells, *High Technology, Space and Society*, Sage Pub., 1985.
2.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al City*, Basil Blackwell, Ltd., 1989.
3. Susan Fainstein & Ann Markusen, “Competition and Fiscal Crisis in New York City: Struggling to Stay on Top in Multi-polar World,” 1991.
4. Stanley Rosen, *Hermeneutics as Politics*, Oxford Univ. Press, 1987.
5. Max Weber, *The City*, The Free Press, 1958, Trans. by D. Martindale & G. Neuwirth.